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과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택면 · 유희정 · 문희영 · 김미정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과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책임자 : 이택면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유희정 (본원 선임연구위원)

문희영 (본원 연구원)

김미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이택면·유희정·문희영·김미정(2013).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과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 간 사

박근혜정부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함에 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추진계획으로 설정하고 특히 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3년 6월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 및 설치 운영 지원 강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은 자력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밀집 지역이면서 여성 및 청년층 근로자의 보육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제대로 된 어린이집 설치가 부진했던 전국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취지의 재계로부터의 정책 건의를 받아들여 산발적이지만 꾸준히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동안 추진돼왔던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결과를 정리하고,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생 사업의 큰 틀 속에서 산업단지내 보육시설을 포함한 근로자 복지 시설 확충 필요성을 주장하는 선행연구들을 충실히 리뷰하면서, 관련 공식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직접 산업단지 관리운영 주체를 면담하고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산단에 일률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가 적합한 산단이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명시한 산단형 어린이집 설치 기준(안전기준 포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유형별로 어떤 지원 정책 개선이 필요한지를 적시함으로써 산업단지가 처한 고유한 조건 하에서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근로자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국정 목표에 적극 부합하는 시의 적절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연구의 발견점과 정책제언들이 향후 관련부처의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중요한 참고자료와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최 금 숙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녀돌봄 서비스 정책은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 밀집 입지 공간인 전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 조치들을 발표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특히 산업단지내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측에서도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을 정부 측에 건의하였으며, 전경련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몇몇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현재 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총 44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대응하여, ①산업단지의 특성과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어떤 조건이 갖추어질 때 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파악하고, ②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존 정책 사업들을 리뷰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③ 나아가 이러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 방안이 직장보육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부모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보다 더 넓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 필요성 및 산업단지 구조개선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 리뷰
-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 법제도와 사업 리뷰
- 현재 전국 각 산업단지의 업종 및 근로자 현황 파악

- 전국 산업단지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에 있는 산업단지의 관련자 심층면접
- 산업단지 유형별로 어린이집 설치 여건 및 요구사항 파악.
- 향후 산업단지내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 제시
- 직장보육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강화에 대한 합의

□ 연구방법.

- 선행연구 문헌자료 분석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축적한 산업단지관련 현황 DB등 기존 통계 분석
- 산업단지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 어린이집 기설치 혹은 설치 예정 산업단지 관계자에 대한 심층 면접
- 연구문제 발굴 및 확정, 설문지 확정, 조사결과 해석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정책제언 발굴 등 연구의 매 중요한 단계마다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

3.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충 관련 선행연구 및 지원정책 리뷰

□ 선행연구

백선정·백현식(2012)의 연구는 경기도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에 대한 근로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두 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아동 보육 현황과 보육서비스 욕구 실태조사 결과는 전체 산업단지 종사 근로자의 전반적 욕구와 수요가 어떠한지에 대해 어느 정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박태현·최정호(2011), 박영철(2012), 서연미(2011) 등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역사를 리뷰하면서 산업단지의 개발과 입지선정 및 관리의 전 과정의 목표와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변화는 생산기능 중심의 집적에서 경영지원, 복지,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 기능으로의 변화로 특징지워진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들을 포함한 김재열, 이규하, 백성준(2013), 장철순(2013), 최정석(2011) 등의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한 근로자 보육 지원 확충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지만, 산업단지 기능 재규정에 대한 논의는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에 필요한 하드웨어적 요건을 조명하는 데 큰 시사점을

찾는다.

이밖에 도남희 외(2012)는 국내외의 기업 자녀양육 지원제도를 폭넓게 리뷰하면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 등과 함께 직장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특히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해외의 직장보육 지원 현황 등을 조명했다. 김미정·고주희(2012)는 직장어린이집의 우수성과 시장에서의 양호한 평가를 환기시키며, 경기도 시책사업의 하나로서 직장어린이집 확충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안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있다. 김지현의 연구(2005)는 비록 오래 전 연구이기는 하나 직장보육 지원 관련 법제의 연혁과 변화방향을 리뷰하면서 향후 직장보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기존 지원정책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2010년 재계로부터 정책건의 형태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이 제안되고, 이에 부응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2011)이 발표된 것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앞서 언급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과거 정부에서 추진돼 왔던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 사업들 중에서 특별히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일련의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들을 첫째 법적 근거 마련 및 설치 부지 혹은 공간 확충을 위한 조치, 둘째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조치, 셋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조치, 넷째 민간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조치, 다섯째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다.

4. 전국 산업단지의 일반 현황

2012년 12월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근거해 지정된 산업단지는 전국에 국가산업단지(41), 일반산업단지(497개), 도시첨단산업단지(11개), 농공산업단지(444) 총 993개이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 중 관리면적은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용지가 분류된

다. 산업시설구역이 전체 관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당 산업단지가 얼마나 ‘복합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서연미, 2011), 여기서 복합화란 산업단지 입주 업종의 복합화(비제조업 부문이 얼마나 입주 가능한가)와 기능의 복합화(생산기능 이외에 주거, 교육, 복지 등의 기능이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는가)로 나뉜다. 주로 어린이집은 관리면적 중 산업시설구역을 제외한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등의 용지에 설립되는데 이는 산업단지 관리면적 중 45.4%에 해당한다.

한편 산업단지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4분기 기준 총 1,878천명의 근로자가 전국의 산업단지에 고용되어 있으며, 2011년 동기 대비 9.6%늘어난 고용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단지 내 여성고용률 평균은 23.0%로 성별격차가 크다. 단지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산업단지는 20.2%, 일반산업단지는 25.9%, 도시첨단사업단지는 26.3%, 농공단지는 29.8%의 여성고용률을 나타낸다.

5. 산업단지 관리운영주체 설문조사 결과

□ 조사 대상 산업단지 현황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300여개 산업단지 리스트에서 총 155개 산업단지에 대해 조사에 성공했으며, 이들 155개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자체 산업단지 담당 부서가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산단이 전체의 5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입주기업 협의체가 관리운영주체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25.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산업단지는 전체의 5.8%였다.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단이 5.8%, 일반산단이 47.1%, 농공단지 45.2% 등이었다. 산업단지의 주력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각종 제조업 분야가 전체의 98.8%로 가장 많고 비제조업 분야는 통틀어 1.2%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 중분류 수준에서,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1.9%)과 식료품 제조업(21.9%)을 주력업종으로 하는 산업단지가 가장 비중이 컸고,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주력업종이라고 응답한 산단은 13.5%, 정보통신분야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주력업종이라는 산단은 10.3%에 달했다. 이들 업종을 AA대분류로 재분류한 결과 중공업이 주력업종인 산단이 전체의 50.3%로 가장 많고, 경공업이 28.3%, 전자산업이 12.8%, 화학공업이 7.1% 순이었다. 한편 조사대상 산업단지 중에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영유아

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이 하나도 입주해있지 않은 산업단지는 전체의 77.4%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현재 산업단지 내에(배후지역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전체의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내에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이 입주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볼 때, 입주해있는 산단에서 어린이집 설치율이 현저히 높아 42.9%를 기록했으며, 한편 중소기업으로만 이루어진 산업단지에서는 설치율이 9.2%에 불과했다. 임의사업장만 입주해있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단지가 절대 다수를 이루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어린이집 설치 여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불리하거나 어린이집 설치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는 산업단지 환경 여건에 대한 진술들을 제시하고 매우그렇다 1점, 매우그렇지 않다 5점의 척도상에 응답하게 한 결과, 환경의 위해성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으로 치우친 응답이 나온 반면(평균 3.47, 3.87), 보육수요 부족(2.63), 단지 외부에 대체 어린이집 충분(2.94),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하는 편이었다. 특히 산단내 설치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가장 긍정으로 치우친 응답이 나왔다(평균 2.45).

한편 현재 산단 안에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총 46개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직장어린이집이 3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국공립어린이집이 34.8%, 민간 어린이집(26.1%) 순이었다. 직장어린이집 중에서는 단독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많고(11개소 23.9%), 산업단지형을 포함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7개소 15.2%에 달했다.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는 장소별로 살펴보면, 지원시설구역과 입주기업체 사옥에 설치된 경우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50%, 45.7%). 공공시설구역이나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각각 1개소씩에 불과했다.

지원시설구역에 설치된 23개 어린이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15개소(65.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지원시설구역에 많은 유형은 민간어린이집(5개소)과 (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3개소)이었다. 단독직장어린이집은 예외없이 입주기업체 사옥내에 설치되는 경향을 보였으며(11개소), (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은 공원을 제외하고 각 시설용지에 골고루 분포해있으나 지원시설구역과 입주기업체사옥에 설치된 경우가 각각 3개소로서 가장 비중이 크다.

한편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지자체나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으로 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건물 혹은 신축할 부지)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 산단 중에서 87곳(56.1%)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부지나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나머지 산업단지들 중에서 해당 공간이 산업단지내 어느 구역에 있는지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68개 산단에서 총 72개의 공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68개 산단 중 42.8%가 지원시설 구역에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빈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입주기업협의회나 산업단지(관리)공단 건물내에 해당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산단은 16.2%에 달했고, 공공시설 구역 내에 있다는 응답은 14.7%, 공원이나 녹지 내에 있다는 응답은 8.8%에 달했다.

□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 참여실태와 전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사업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두 개 산단만이 공모에 응해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153개 산단은 공모에 응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불참 산단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우리 산단에는 어린이집이 필요없거나 설치가 부적절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공모 불참 산단의 69.9%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그런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를 이유로 선택한 산단이 23.5%,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를 이유로 응답한 산단이 17.6%, “참여사업주 모집 실패”가 11.1%에 달했다. 또한 “설치공간(부지)이 부족해서”를 이유로 든 산단은 5.2%에 달했다.

관리운영주체 유형별, 산업단지 유형별, 주력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산단내 어린이집 설치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해서 응모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산단이거나(77.8%) 국가산단(77.8%) 혹은 농공단지(78.3%), 그리고 중화학 공업이 주력업종인 산단(72.7%)에서 특별히 더 높았고, 그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다는 응답비중은 지자체가 관리운영주체인 산단(31.4%), 일반산단(27.8%), 경공업·화학공업·비제조업이 주력업종인 산단(27.9%, 45.5%, 50%)에서 특별히 높았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 미충족을 공모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든 산단의 비중은 입주기업협의회가 관리운영주체인 산단(35.9%), 농공단지(23.2%), 경공업이 주력업종인 산단(20.9%)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설치공간 부족을 이유로 든 비중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산단(18.8%), 일반산업단지(11.1%)에서 현저히 높았다. 이렇게 산업단지 유형별로 산

단형 공동어린이집 공모사업 불참 이유가 다르므로, 사업확대를 위해서는 산단 유형별로 맞춤형 전략과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산단형공동어린이집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53개 사업 미참여 산단 중 24개소(15.7%)만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지자체가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산단(25%, 17.4%), 일반산단(16.7%), 경공업·전자산업을 주력업종으로 하는 산단(18.6%, 20%)에서 향후 참여계획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더 높았다.

6. 산업단지 관리운영주체, 대표사업주,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 조사개요

산업단지 3곳의 관리운영주체,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의 대표사업주, 산단내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일반현황.
2.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보육 수요 파악 방식
3.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자원 조달 방식
4.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건립 부지(공간) 마련 방식
5.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자원 조달 방식(정부 지원 이외 추가 운영비 조달 방식)
6. 대표사업주 선정 및 참여사업주간 협약 체결 과정 및 애로 사항
7. (지자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우) 어린이집 설치시 지자체의 역할 및 향후 지자체에 바라는 점.
8. 향후 다른 산업단지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유념해야 할 점, 또는 체크리스트.

□ 주요 결과

-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로자의 보육 수요 파악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주기업체 운영협의회 회의를 통해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민간 위탁운영업체가 보육수요 파악을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은 대부분 정부 지원금(설치비의 경우 15억5천 내외)으로는 부족하여 부족분에 대해 각 산단 실정에 맞는 분담 방식을 정해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분담 방식이 대체로 대표사업주가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었다.
- 정부 지원금 이외에 추가 설치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면접대상자들은 주거지역 주변의 대체 어린이집보다 시설면에서 산단 어린이집이 월등히 좋아야만 원아 모집 및 유지, 그로 인한 근로자 유인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어린이집 설치 부지(공간)는 주로 지자체의 무상 임대 혹은 대표사업주의 사옥 혹은 소유 토지 활용 등을 통해 조달되었다. 면접자 대부분은 부지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매입이나 임대 등의 방법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면 어린이집 설치 자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할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지자체나 기업체로부터의 무상 조달은 매우 우연적인 사건이므로 부지 조달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어린이집 운영비의 정부지원금 초과 부분에 대한 분담은 설치비 초과분에 대한 분담 방식과 마찬가지로 대표사업주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안 같은 경우 참여사업주 중에 의무사업장이 있고 입주기업협의체가 대표사업주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업장 측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협약이 돼있었다.
- 대표사업주 선정 및 대표사업주와 참여사업주 간 협약체결 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우선 어린이집 설치 운영 전 과정과 정부지원 사업 참여 과정에서 대표사업주가 져야 할 과도한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협약체결 과정에서 참여사업주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연구개발 등 핵심 인력이 주를 이루는 기업인지, 생산라인 위주의 인력을 주로 고용한 기업인지에 따라 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달라 이를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견해가 주목할 만 했다.
- 타 산단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대부분의 면접자들이 사전에 꼼꼼한 계획 수립으로 예기치 못한 투자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전문 업체 혹은 기관에 의한 컨설팅이 건축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7.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책제언

□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전제조건

- 위해환경 검토: 산업단지의 환경이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단지에 따라 입주 기업이 유해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을 유발하거나, 화재나 폭발 등과 같은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이나 위해요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평가할 산단 어린이집에 국한된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산단 노후화 정도 검토: 노후산단의 경우, 앞서 살펴본 환경적 위해성 문제가 심화돼 이미 주변 주민들로부터 산단 이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변이 이미 도심화된 경우가 많아 도로 부족 등으로 교통량이 호폭주하고 단지내 주차문제가 산단 자체의 물류 및 유통기능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설치에 별도의 등하원 교통수단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자가운전 수요를 확대시켜 산단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 설치공간 확보: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간 마련 방식은 지자체나 산단공동에서 자체 보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 공동직장어린이집 대표(참여) 사업주 중에서 자사 사옥내 부지나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산단내 분양 중인 부지나 공간을 직접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등으로 대별된다. 세 번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우선은 지자체나 산단공동에서 부지나 공간을 제공받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 효과적인 부지 확보 방식이다.
- 보육수요 확보: 수요조사 당시에 당장 산단내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아이를 보내겠다는 응답 비율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산단내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부모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확인되면 부모들의 수요는 지역의 대체 어린이집들에서 산단내 어린이집으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산단내 입주 근로자들의 연령대가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 40대를 넘겨 잠재수요마저 부족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을 설치해도 안전할 만큼 환경적으로 위해하지 않은 산단(별도 안전 기준, 설치 기준 마련 필요), 노후산단이 아닌 산단, 지자체나 산단공동, 입주 기업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나 공간 확보가 가능한 산단, 미취학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3-40대 근로자(남녀불문)의

비중이 높은 산단이라는 네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산단이 단기적 시간 지평에서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산단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더 대표성 높은 조사를 통해 이들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산단의 비중이 얼마나 되고 관리운영주체나 업종이나 산단유형별 분포는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단내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체크리스트로 확정하여 보급해야 한다. 환경이나 교통, 보육수요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특정 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것이 필요하거나 타당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각 산단 관리운영주체가 산단내 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 활성화 방안

- 직장어린이집: 우선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권소사업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 기준을 완화하거나 개원 시점 부서가 아니라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의 경우 참여사업주 모집에 필요한 컨설팅과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비 지원에 대해 사업주 자부담 비율(현행 10%)을 중소기업에 한해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 사업주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는 대표사업주에게만 제공되므로 이를 참여 사업주에게까지 확대하고, 동시에 여러 부담을 떠안게 되는 대표사업주에 대해서는 좀 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국공립어린이집: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그리고 지자체의 보육계획에 산단에 설치할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계획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시도 보육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 산업단지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여건을 따져 계획에 설치 물량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설치를 명시한 것처럼(법제12조, 2013년 8월 개정), 산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우선 설치 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 민간어린이집: 타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이 임대건물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앞서 살펴본 산업법 상의 분양가 인하 조치에 덧붙여 어린이집 용지에 대한 임대료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 현재는 산집법상 공급 분양가예다 시중은행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임대료를 규정하고 있으나(령 제 41.42조) 어린이집 용도의 경우 임대료 인하 특례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 다른 근로자 복지시설(학교, 직업훈련기관, 의료시설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통 지원방안: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첫째, 어린이집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산단 환경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어떤 환경기준을 충족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설치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산업단지 단위로 재생사업이나 구조고도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바, 시행주체가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어린이집 공간을 확보할 시 용적률 상향조정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단내 어린이집 유치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8.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함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공간(부지)

앞서 제시한 환경기준 및 체크리스트 상의 요건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자사 사옥의 공간을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 파격적인 면감세 혜택이 필요하다.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제도 개선

근로자의 보육서비스 수요가 반드시 기업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업종 특성상 어린이집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입지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해당 기업의 업종 특성, 입지 환경, 근속 근로자의 실보육수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입지 환경이 적합하고 부지확보가 용이하

면서 자력으로나 공동으로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곤란한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한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동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직장어린이집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아동 교육에 대해 제기되는 가장 유력한 비판 중 하나는 영유아들을 부모들의 근로시간 주기에 맞추어 장시간 교육하는 것이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내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 등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 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장시간 교육에 걸맞은 직장어린이집 특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 추진체계 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요구가 가장 큰 중소기업은 예산이나 재원의 부족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부족에도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이 개별 혹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할 때, 담당인력의 부족 혹은 경험의 부족 등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방법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컨설팅 및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 현재 이 기능을 담당하는 직장보육지원센터는 전국에 2개소만 운영되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컨설팅을 적절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향후 정책방향

노동권을 제한받지 않으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이지, 특정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부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관련 정책의 장기적 방향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설치시 패널티 강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단기적으로는 선별적 지원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면, 가장 취약한 집단에 우선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력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직장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중소 영세업체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II. 선행 연구 및 지원정책 리뷰	7
1.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충 관련 선행연구	9
2.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충 지원 정책	11
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및 설치 공간 확대	12
나.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운영 지원	13
다. 지원 인프라 확충	19
III. 산업단지의 현황 및 어린이집 설치 여건 실태	21
1. 자료 및 조사 개요	23
2. 전국 산업단지의 일반현황	24
3. 산업단지 관리운영주체 설문조사 결과	27
가. 조사 대상 산업단지 현황	27
나. 어린이집 설치 여건	34
다.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참여실태와 전망	39
4. 심층면접 결과	43
가. 조사 개요	43
나. 주요 결과	44

IV.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책제안	49
1.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전제조건	51
가. 위해환경 검토	51
나. 산업단지 노후화 정도 검토	52
다. 설치공간 확보	52
라. 보육수요 확보	53
마.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체크리스트	54
2.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 활성화 방안	54
가. 직장어린이집	55
나. 국공립어린이집	55
다. 민간어린이집	56
라. 공통 지원 방안	57
3.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합의	57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공간(부지) 확충	58
나.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제도 개선	58
다. 직장어린이집 특화 보육프로그램 개발	59
라. 추진체계 강화	59
마. 향후 정책추진 방향	60
 ■ 참고문헌	61
 ■ 부 록	63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여건 파악을 위한 조사 설문지	65
 ■ Abstract	71

표 목 차

<표 II-1> 어린이집 설치 참여주체별 역할	15
<표 II-2>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내역	16
<표 II-3> 2013년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소시엄 공모사업 지원사업자 현황	17
<표 III-1> 산업단지유형별 조성현황	25
<표 III-2> 산업단지 12.4/4분기 고용현황	25
<표 III-3> 단지유형별 성별 고용현황	26
<표 III-4> 지역별 여성 고용률	27
<표 III-5> 관리운영주체 유형별 산업단지	28
<표 III-6> 산업단지 유형별 분포	28
<표 III-7> 산업단지 주력업종별 분포	29
<표 III-8> 산업단지 주력업종별 분포	31
<표 III-9> 500인이상 대기업 수 별 산업단지	32
<표 III-10> 산단유형 및 주력업종별 어린이집 유무	33
<표 III-11> 산단내 의무사업장 입주 여부별 어린이집 유무	33
<표 III-12> 산단내 어린이집 설치 여건에 대한 인식	34
<표 III-13> 산단내 어린이집 숫자별 분포	36
<표 III-14> 기설치 어린이집 유형별 분포	36
<표 III-15> 어린이집 설치 구역별 분포	37
<표 III-16> 설치 구역별·유형별 어린이집 분포	38
<표 III-17> 무상제공가능 부지(공간)의 위치별 분포: 복수응답	39
<표 III-18> 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에 응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	40
<표 III-19> 관리주체 유형별, 산단유형별, 주력업종별 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에 응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	41

<표 III-20> 관리주체 유형별, 산단유형별, 주력업종별 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 향후 참여 계획유무	42
<표 III-21> 심증면접조사 대상자	43

그림 목 차

[그림 Ⅲ-1] 산업단지 유형별 고용 비중(%)	26
----------------------------------	----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녀돌봄 서비스 정책은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서비스 전달에 있어 맞벌이 부부나 워킹맘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미미했으며 그 결과 맞벌이 부부의 미취학 자녀 중 약 15%가 시설보육을 받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2010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또한 일하는 부모를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도 활성화되지 못하여 직장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5%에 불과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2012).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 밀집 입지 공간인 전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보육 부담을 해소하며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 조치들을 발표하였으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국정과제 66)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제시하였고(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도자료, 2013), 그 후속조치로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초점을 맞춘 부처합동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특히 산업단지내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3).

또한 기업 측에서도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을 정부 측에 건의하였으며(대한상의, 2010), 전경련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몇몇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했다. 대한상의가 수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 44.1%가 육아문제로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39.3%는 육아문제로 여성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68.7%가 산업단지내 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기업측의 수요도 현저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한상의,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현재 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총 44

4 ●●●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과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대응하여, ①산업단지의 특성과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어떤 조건이 갖추어질 때 산업단지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파악하고, ②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과 직장몰입도 및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며 산업단지 기업에게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덜고 생산성과 직장몰입도가 높은 남녀 근로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 방안이 직장보육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부모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보다 더 넓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는 먼저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 필요성 및 산업단지 구조개선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리뷰하고,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 법제도와 사업들을 리뷰함으로써 산업단지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배경을 파악한다.

그 다음 현재 전국 각 산업단지의 업종 및 근로자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전국 산업단지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산업단지 유형별로 어린이집 설치 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착목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한다. 또한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에 있는 산업단지의 관련자들을 심층면접하여 계량적 설문조사에서 얻을 수 없는 질적 정보들을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산업단지내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 개선안이 직장보육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강화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선행연구 문헌자료 분석을 비롯,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축적한 산업단지관련 현황 DB, 산업단지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어린이집 기설치 혹은 설치 예정 산업단지 관계자에 대한 심층 면접 등 질적 양적 방법을 병행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문제 발굴 및 확정, 설문지 확정, 조사결과 해석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정책제언 발굴 등 연구의 매 중요한 단계마다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다.

II

선행 연구 및 지원정책 리뷰

1.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충 관련 선행연구 9
2.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충 지원 정책 11

1.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충 관련 선행연구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최근 선행 연구로는 백선정·백현식(2012)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경기도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에 대한 근로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산단에 국한된 사례연구 성격이 강하여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가능성 및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에 있어 산업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산업단지가 처한 고유한 맥락에 근거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아동 보육 현황과 보육서비스 욕구 실태조사 결과는 전체 산업단지 종사 근로자의 전반적 욕구와 수요가 어떠한지에 대해 어느 정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편 비록 직접적으로 어린이집 설치나 보육 서비스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단지의 거시적 성격 변화에 주목하면서 보육서비스를 포함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향후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제 기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태현·최정호(2011), 박영철(2012), 서연미(2011) 등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역사를 리뷰하면서 산업단지의 개발과 입지선정 및 관리의 전 과정의 목표와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변화는 생산기능 중심의 집적에서 경영지원, 복지,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 기능으로의 변화로 특징지워진다고 주장한다. 김재열·이규하·백성준(2013), 장철순(2013), 최정석(2011)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돼왔던 구조고도화사업, 복합화 사업, 재생사업의 성공 조건을 각각 제안하고 있다. 비록 직접적으로 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한 근로자 보육 지원 확충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산업단지 기능 재규정에 대한 논의는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에 필요한 하드웨어적 요건을 조명

하는 데 큰 시사점을 갖는다.

이밖에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직장어린이집 일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장보육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고민한 연구들로는 도남희 외(2012), 김미정·고주희(2012), 김지현(2005) 등을 들 수 있다. 도남희 외(2012)는 국내외의 기업 자녀양육 지원제도를 폭넓게 리뷰하면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 등과 함께 직장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특히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해외의 직장보육 지원 현황 등을 조망했다. 나아가 기업의 근로자와 기업 인사담당자를 함께 조사하여 자녀 양육 어려움과 지원 서비스 욕구,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 어려움과 정부정책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업 자녀양육 지원 제도와 관련한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한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정책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은 일률적으로 확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규모별·입지여건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잘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나열하고 각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 혹은 기업군에 대해 선별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한편 김미정·고주희(2012)는 직장어린이집의 우수성과 시장에서의 양호한 평가를 환기시키며, 경기도 시책사업의 하나로서 직장어린이집 확충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안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사업장과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체와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입각하여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체, 해당 직장 어린이집, 해당 사업체 종사 근로자(직장어린이집 이용 근로자와 미이용 근로자 모두 조사)를 각각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모범운영 어린이집과 해당 기업체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등 양적·질적 조사를 병행하였고,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와 직장어린이집 지원 제도 및 법령에 대한 리뷰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 직장

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사업장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에서 기업의 업종별 특성이나 입지조건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고, 직장어린이집 확충이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조건에서도 최선인 방안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지현의 연구(2005)는 비록 오래전 연구이기는 하나 직장보육 지원 관련 법제의 연혁과 변화방향을 리뷰하면서 향후 직장보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의 법령 변화를 살펴보면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설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두가지 갈래로 추진돼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직장보육 활성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비록 제안하고 있는 정책 대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직장보육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진단과 직장보육 정책 기조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2.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충 지원 정책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산업단지 재생 및 복합화 사업이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통상부)에 의해 2008년 말부터 추진되면서 산업단지 안에 생산시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복지와 주거 및 문화향유를 위한 시설들이 유치되기 시작했다.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2010년 재계로부터 정책건의 형태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이 제안되고(대한상의, 2010), 이에 부응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2011)이 발표된 것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앞서 언급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과거 정부에서 추진돼 왔던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 사업들 중에서 특별히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일련의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들을 첫째 법적 근거 마련 및 설치 부지 혹은 공간 확충을 위한 조치, 둘째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조치, 셋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조치, 넷째 민간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조치, 다섯째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및 설치 공간 확대

우선 정부는 법령과 제도를 개편하여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어린이집 설치 가능 공간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우선 산업단지의 관리를 규율하는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확충되어야 할 공공시설의 하나로 포함시킴으로써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법 제2조, 제45조의 2, 시행령 제4조의5, 제58조의2),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단지 관리업무로 규정하였으며(시행령 제5조), 입주업체근로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을 산업단지공단의 고유업무로도 규정하였다(법 제45조의13/ 5의2호). 이로써 산업단지내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은 산업단지 관리권자 혹은 관리기관이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상의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내에 ‘지원기관’으로서 입주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으며(시행령 제6조 6항), 또한 지식산업센터에도 다른 생산시설이나 지원기관과 동일하게 분양이나 임대로 통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임대수익이 높은 지원시설(상점 등)을 건축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유치할 경우 30%까지 지원시설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이 어린이집을 건물 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인센티

브를 갖도록 유도하였다(법 제28조의5, 령 제36조의4, 2호).

한편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법) 등에 입각한 개발 및 입지 조성 과정에 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단계에 어린이집을 위한 부지를 지자체가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법 제 11조의2).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통해 산업단지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설치 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산업단지내 건물 및 지식산업센터 내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경우 보육실을 반드시 1층에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1층에서 5층 사이에 둘 수 있음), 직장 어린이집에 한하여 조리실 설치 기준도 완화하여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시설이 있는 경우 조리공간을 분리한다는 조건으로 별도의 조리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에 한하여 옥외놀이터 설치 기준도 완화하여, 업무용 시설 밀집 등으로 인해 별도 옥외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실내 놀이터를 설치하거나 혹은 인근 어린이용 옥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 별표1).

또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구역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별표 1). 이는 도시공원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만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었던 종전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단지내 도시공원에서는 직장어린이집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운영 지원

산업단지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설치 기준의 완화 및 공간확보 이외에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유형별로 어린이집이 산업단지에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고용부와 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일반에 대한 지원¹⁾ 이외에

1) 직장어린이집 일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4 ●●●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과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특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프로그램으로
 는 고용노동부의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유일하다. 산업단
 지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영유아보육법을 개
 정하여(시행규칙 제5조의4) 산업단지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관리공단, 지자체),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도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주체가

지원 주체	구분	지원 종류	내 역	지원한도	대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고 용 노 동 부	설 치 비	무상 지원	시설비	2억원 (공동5억원)	소요금액의 60% 지원 * 영아·장애아시설은 구분 없이 80% 지원	소요금액의 80% 지원
			유구비품비	5천만원	소요금액의 60% 지원 * 교체시 3년 단위로 3천만원	소요금액의 80% 지원
		용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 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2%) * 토지매입비는 용자대상에서 제외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1%)
	유 형 비	무상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지원	월 100만원	1인당 월 80만원 *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취사부는 매월 말일 기준 보육아동수와 관계없이 지원	1인당 월 10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	월 120만원 ~520만원	해당없음	월 120~520만원 (매월 말일 기준) • 현원 20인 미만 : 월 120만원 • 현원 20~39인 이하 : 월 200만원 • 현원 40~59인 이하 : 월 280만원 • 현원 60~79인 이하 : 월 360만원 • 현원 80~99인 이하 : 월 440만원 • 현원 100인 이상 : 월 520만원
보 건 보 육 지 부 (시· 군· 구)	유 형 비	무상 지원	시간연장 보육 지원	시간당 2,700원	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 *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어린이 집으로 지정받은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년 50만원 ~120만원	지원기준 월의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 61인 이상 어린이집 : 120만원 • 40~60인 이하 어린이집 : 100만원 • 21~39인 이하 어린이집 : 90만원 • 10~20인 이하 어린이집 : 80만원 • 3~ 9인 이하 어린이집 : 50만원 * 지원대상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 원받지 않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 고 있는 어린이집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대부분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는 행정절차 등을 담당할 인력의 부재 등 부담이 커 산업단지관리기관이나 지자체, 사업주 협의체 등이 공동어린이집 설치 업무를 대신하는 대표사업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 주관의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산업단지관리공단(혹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입주기업협의회 등이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응할 경우 시설비 및 운영비를 포함, 최대 22억원까지(융자 포함)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컨소시엄 참여주체별 역할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Ⅱ-1〉 어린이집 설치 참여주체별 역할

구분	고용부	산단공/지자체	중소기업	기타
설치비	설치비의 90% 지원	건물 또는 부지 제공	설치비의 10% 부담	※ 대기업은 일부 참여 가능
운영비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지원	
기타	어린이집은 지원기간 동안 운영 유지(5~10년)			

출처: 직장보육지원센터 내부자료

고용노동부는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산업단지공단이나 지자체는 건물 또는 부지 제공, 참여 중소기업은 설치비 및 운영 수지차 부담의 역할을 각각 맡도록 되어있으며, 어린이집은 지원기간(5년이상 최장 10년) 동안 운영을 유지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표 Ⅱ-2〉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내역

구 분	지원종류	지원내역	한도	비고
설치비	무상지원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15억원	총 소요금액의 90% 한도
		교재교구비	5천만원	
	융 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7억원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연이율 : 1%
운영비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1인당 100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보육아동수에 따라 월 120만원~520만원)			

* 무상지원 및 융자 포함 최대 22억원 지원

고용노동부의 지원은 설치비에 대한 무상지원(시설전환비·시설건립비 15억원 한도) 및 융자(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등 7억원 한도)와 운영비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일반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산업단지내 기업에게도 적용하되 산업단지내 기업의 경우 시설전환비 및 시설건립비 지원한도를 15억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소프트웨어적 지원으로는 중개기능 및 컨설팅 지원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단지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간의 정보교류 부족, 운영 부담 등으로 활성화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지자체 등이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하여 직장어린이집 이용 사업장을 모집하는 등 대표사업주로서 중개기능을 담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설치 전 과정(부지나 건물선정,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주 간담회나 설명회 개최, 어린이집 설계 자문, 시공업체 선정 지원, 공사비용 적정성 평가, 교재교구비 산출 등)에 대해 전담담당자를 두어 지원비 신청업무 외 종합적인 설치컨설팅 기능을 제공하여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어린이집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의 전문성 부족 문제 및 운영관리 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MOU체결을 통한 운영지원업무를 체

계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3년 8월까지 총 3회에 걸친 공모에 의거, 총 10개 산업단지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179개 사업장이 참여하여 총 944명의 보육정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 Ⅱ-3〉 2013년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소시엄 공모사업
지원사업자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번	공모 및 선정시기	단지명	소재지	참여사업장	보육정원
1	'13.3월(1차)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충북(청주)	14	49
2	'13.5월(2차)	공근농공단지	강원(횡성)	11	60
3	'13.5월(2차)	청주산업단지	충북(청주)	29	99
4	'13.5월(2차)	거두농공단지	강원(춘천)	10	80
5	'13.5월(2차)	대포농공단지	강원(속초)	23	97
6	'13.5월(2차)	구미국가산업단지	경북(구미)	32	151
7	'13.5월(2차)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서울	25	113
8	'13.8월(3차)	동탄산업단지	경기(화성)	13	99
9	'13.8월(3차)	경산산업단지	경북(경산)	11	97
10	'13.8월(3차)	파주출판단지	경기(파주)	11	99

* 출처: 직장보육지원센터 내부자료

정부는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또한 지원해왔다. 2008년을 기점으로 (당시)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산업단지삶의질고도화사업(QWL벨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추진되었다. 산단공은 산단내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각종 인센티브 사업들을 홍보하고 산단내 보육수요 조사 수행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유치를 독려했다.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기도 했다. 그 첫 사례로는 서울 가산디지털산업단지내 아이뜰어린이집설치(2011. 7)를 들 수 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

서관실이 주관하고, 산단공이 금천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했다. 이 선례를 따라 산단공이나 지자체가 부지 제공 및 설치를 담당하고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산단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사업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주목할 만 하다. 이는 경기도와 지역내 시군이 협력하여 2012년 신규 설치 계획중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중 15개소를 산단내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국가산단 뿐 아니라 일반산단 농동단지 등 모두 포괄)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당 10억(도비 5, 시군비 5)이 지원되며, 실제 운영 및 관리감독은 시군이 맡게 된다.

또한 정부 사업은 아니지만 전경련을 중심으로 경제단체의 어린이집 확충사업(경제계 보육지원 사업)도 산단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전경련이 회원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전국 보육시설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까지 전국에 50개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총18개 회원사가 총 70억원을 출연하여 일차적으로 광주남동, 인천, 시화 등 3개 국가산단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직접 지원이나 혹은 경제단체의 자금지원을 활용한 지원 이외에, 정부는 산업단지에 민간어린이집이 유리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산단내 어린이집이 확충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정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법)”과 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에 조성된 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학교시설용지, 어린이집 용지, 공공의료시설 용지 등으로 공급하려 할 때는 분양가를 조성원가 혹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령 제40조 6항 2호). 또한 앞서 언급한 지식산업센터 내 어린이집 유치 인센티브 강화(지원시설 허용 면적 상향조정) 역시 민간어린이집의 산단내 입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지원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지원인프라 확충이다. 지자체나 산단 입주기업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 어린이집 설치·운영 방법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이를 지원하는 직장보육지원센터는 전국에 2개소만 운영하여 컨설팅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확대하고 17개 시·도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실시 강화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직장보육지원센터 인력증원 및 중부권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보건복지부, 2011).

III

산업단지의 현황 및 어린이집 설치 여건 실태

1. 자료 및 조사 개요	23
2. 전국 산업단지의 일반현황	24
3. 산업단지 관리운영주체 설문조사 결과	27
4. 심층면접 결과	43

1. 자료 및 조사 개요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 모두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서 관련 주체란 일차적으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일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산업단지 관리운영 주체인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자체, 입주기업협의회 등이 될 것이다. 이들 각각에 대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수요와 요구사항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예산 및 여타 가용 자원의 제약으로 본 연구는 산업단지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조사만을 실시했다. 그 이유는 입주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선행연구를 통해 수차례 수행되어 많은 발견과 시사점들이 보고된 바 있으며,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공간은 산단 역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수요자의 욕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공통의 공간이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얼마나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냐에 대한 파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산업단지의 일반현황에 관한 자료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2년 4분기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산업단지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단지 단위로 어린이집 설치 여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모았다. 한편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심층적 정보는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공모사업에 참여한 4개 산업단지 관리운영주체 및 대표사업주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했다.

산업단지 관리운영주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 300여개 산업단지에 대한 리스트와 연락처를 제공받아 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중 155개 업체가 조사에 응했다. 한편 심층면접조사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공모에 응한 천안, 청주, 춘천, 세곳의 산업단지 관리운영주체와 대표사업주 및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중 한 곳은 이미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었다.

2. 전국 산업단지의 일반현황

2012년 12월 현재 산업법 제6조~제8조에 근거해 지정된 산업단지는 전국에 국가산업단지(41), 일반산업단지(497개), 도시첨단산업단지(11개), 농공산업단지(444)²⁾ 총 993개이다.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일반산단은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시군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 국가산단의 경우, 지정 및 개발은 국토교통부에서 맡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권한을 갖는 이원적 거버넌스 하에 있다. 즉 국가산단의 지정·개발권자는 국토교통부,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산단과 도시첨단산단의 지정권자와 관리권자는 모두 시도지사 혹은 기초자치단체장이며, 농공단지의 지정권자와 관리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돼있다(박영철, 2012).

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 중 산업법 제33조에 의해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에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된 면적을 관리면적이라고 한다. 관리면적은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용지가 분류된다. 산업시설구역이 전체 관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당 산업단지가 얼마나 ‘복합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서연미, 2011), 여기서 복합화란 산업단지 입주 업종의 복합화(비제조업 부문이 얼마나 입주 가능한가)와 기능의 복합화(생산기능 이외에 주거, 교육, 복지 등의 기능이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는가)로 나뉜다. 주로 어린이집은 관리면적 중 산업시설구역을 제외한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등의 용지에 설립되는데 이는 산업단지 관리면적 중 45.4%에 해당한다. 산업단지 유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에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Ⅲ. 산업단지의 현황 및 어린이집 설치 여건 실태 ●● 25

별로 살펴보면, 국가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해당 면적 비율이 높다.

〈표 Ⅲ-1〉 산업단지유형별 조성현황

(단위: 개, 천㎡, %)

단지유형	단지수	관리면적	관리면적 대비 비산업시설구역 면적
국가	41(4.1)	576,764	53.6
일반	497(50.1)	486,136	39.1
도시첨단	11(1.1)	2,269	51.7
농공	444(44.7)	70,542	22.9
계	993	1,135,711	45.4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13),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2012년 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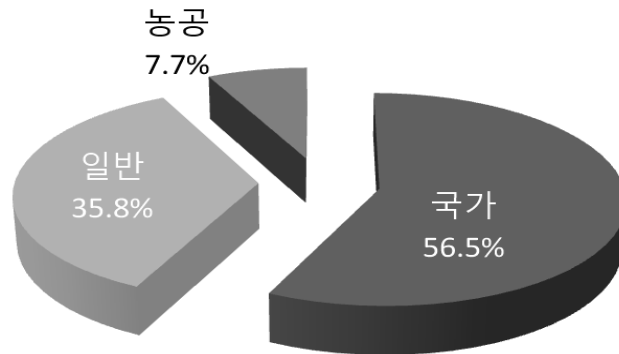
한편 산업단지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4분기 기준 총 1,878천명의 근로자가 전국의 산업단지에 고용되어 있으며, 2011년 동기 대비 9.6%늘어난 고용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산단 유형별로는 도시첨단 단지의 고용규모 증가율이 43%로 가장 높으며, 국가산단은 10.9% 증가했으나 농공단지는 가장 낮은 1.1%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2012년 4분기 현재 국가산단에 전 산단 근로자의 56.5%가 고용돼 있고, 농공단지에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산단 근로자의 7.7%에 불과하다.

〈표 Ⅲ-2〉 산업단지 12.4/4분기 고용현황

(단위: 명, %)

구 분	'12.4/4분기	'11.4/4분기	증감률
국 가	1,072,277	967,101	10.9
일 반	664,681	607,308	9.4
도시첨단	1,444	1,010	43.0
농 공	139,706	138,181	1.1
합 계	1,878,108	1,713,600	9.6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2012),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2012),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그림 Ⅲ-1] 산업단지 유형별 고용 비중(%)

산업단지 내 여성고용률 평균은 23.0%로 성별격차가 크다. 단지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산업단지는 20.2%, 일반산업단지는 25.9%, 도시첨단사업단지는 26.3%, 농공단지는 29.8%의 여성고용률을 나타낸다.

〈표 Ⅲ-3〉 단지유형별 성별 고용현황

(단위: 명, %)

	남성	여성	여성비율
국가	801,347	202,960	20.2
일반	464,684	162,466	25.9
도시첨단	1,064	380	26.3
농공	93,914	39,958	29.8
계	1,361,009	405,764	23.0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13),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2012년 4분기)'를 참고하여 재구성

16개 광역시도 중 울산이 7.8%로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고, 전남과 경남 역시 13.5%, 17.1%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강원은 34.6%로 16개 광역시도 중 산업단지 내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다.

Ⅲ. 산업단지의 현황 및 어린이집 설치 여건 실태 ●●● 27

〈표 Ⅲ-4〉 지역별 여성 고용률

(단위: %)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평균
서울	28.0	19.8	-	-	27.9
부산	21.1	26.1	X	16.8	23.8
대구	X	25.2	-	29.6	25.2
인천	22.9	19.4	X	-	22.4
광주	39.5	25.0	-	21.4	27.8
대전	22.7	26.8	-	-	23.2
울산	7.0	24.6	-	19.4	7.8
경기	22.9	29.2	X	22.0	25.0
강원	20.0	31.3	18.9	39.2	34.6
충북	32.7	27.5	39.3	29.8	28.1
충남	10.3	30.8	X	29.1	29.1
전북	12.7	16.7	20.9	33.5	18.2
전남	6.2	22.3	-	34.8	13.5
경북	23.4	24.6	-	30.1	24.6
경남	14.8	19.6	X	23.1	17.1
제주	29.0	X	-	25.4	26.7

*주: 해당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고용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X』로 표시함.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13),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2012년 4분기)’를 참고하여 재구

3. 산업단지 관리운영주체 설문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산업단지 현황

총 155개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지자체 산업단지 담당 부서가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산단이 전체의 5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입주기업 협의체가 관리운영주체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25.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산업단지는 전체의 5.8%였다.

〈표 Ⅲ-5〉 관리운영주체 유형별 산업단지

(개소, %)

구분	빈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9	5.8
산업단지관리공단	16	10.3
지자체 경제진흥과 등 산업단지 담당 부서	88	56.8
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주 협의체(협회)	39	25.2
기타	3	1.9
계	155	100.0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단이 5.8%, 일반산단이 47.1%, 농공단지 45.2% 등이었다. 앞서 살펴본 2012년12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 전수 집계에 따르면 국가산단이 4.1%, 일반산단이 50.1%, 농공단지가 4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가 비록 체계적인 확률표집 과정을 거치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산업단지 유형에 있어서만큼은 모집단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다소 과대표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6〉 산업단지 유형별 분포

(개소, %)

구분	빈도	%
국가산업단지	9	5.8
일반산업단지	73	47.1
농공단지	70	45.2
자유무역	3	1.9
계	155	100.0

Ⅲ. 산업단지의 현황 및 어린이집 설치 여건 실태 ●●● 29

산업단지의 주력업종³⁾별 분포를 살펴보면 각종 제조업 분야가 전체의 98.8%로 가장 많고 비제조업 분야는 통틀어 1.2%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 중 분류 수준에서,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1.9%)과 식료품 제조업(21.9%)을 주력업종으로 하는 산업단지가 가장 비중이 컸고,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주력업종이라고 응답한 산단은 13.5%, 정보통신분야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주력업종이라는 산단은 10.3%에 달했다.

〈표 Ⅲ-7〉 산업단지 주력업종별 분포

(중분류: 개소, %)

구분	빈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	21.9
식료품 제조업	34	2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	10.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	13.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	3.9
1차 금속 제조업	8	5.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9	5.8
섬유제품 제조업	9	5.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8	5.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	1.3
전기장비 제조업	3	1.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1	.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	.6
비제조업(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협회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	1.2
계	155	100.0

3) 주력업종이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정의했다.

30 ●●●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과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후 업종별 분석에서는 중분류 제조업들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종분류⁴⁾에 따라 다음 <표 III-8>과 같은 4가지 대분류업종으로 재분류해서 분석할 것이다. AA대분류로 재분류한 결과 중공업이 주력업종인 산단이 전체의 50.3%로 가장 많고, 경공업이 28.3%, 전자산업이 12.8%, 화학공업이 7.1% 순이었다.

4)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종분류는 다음과 같다.

경공업1(10~15,18)	10	식품제조업
	11	음료제조업
	12	담배제조업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14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15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경공업2(16,17,32~33)	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32	가구제조업
	33	기타제품제조업
화학공업(19~22)	19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중공업(23~25,29~31)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4	1차금속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전자산업 (26~28)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Ⅲ. 산업단지의 현황 및 어린이집 설치 여건 실태 ●●● 31

〈표 Ⅲ-8〉 산업단지 주력업종별 분포

(단위: 개소(%))

중분류	AA대분류	빈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중공업	78	50.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경공업	44	28.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산업	20	12.8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공업	11	7.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제조업(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협회수리및개인서비스업)		2	1.2
계		155	100.0

한편 조사대상 산업단지 중에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이 하나도 입주해있지 않은 산업단지는 전체의 77.4%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 1개-3개사 정도로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산업단지는 18.6%를 차지했다.

〈표 Ⅲ-9〉 500인 이상 대기업 수 별 산업단지

(단위: 개소(%))

구분	빈도	%
하나도 없음	120	77.4
1개사	12	7.7
2개사	12	7.7
3개사	5	3.2
4개사	1	.6
5개사	2	1.3
6개사	1	.6
24개사	1	.6
40개사	1	.6
계	155	100.0

현재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전체의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2013년 9월 현재 전국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44개소에 불과한데, 이번 조사대상 산업단지는 직장보육지원센터가 관리하는 리스트 중에서 추출되었으므로 어린이집이 설치돼있는 산업단지가 과대표집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어린이집이 설치된 산단 비중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산단과 농공단지는 어린이집 설치율이 각각 17.8%와 11.4%로 매우 낮았다. 주력업종 별로는 중공업이나 화학공업이 주력업종인 산단에서는 어린이집 설치율이 평균보다 낮았고(15.4%, 9.1%), 전자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단지에서 어린이집 설치율이 가장 높았다(35.0%). 그러나 비제조업 및 경공업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단지에서 어린이집 설치율이 크게 낮은 것은 원인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산업단지의 현황 및 어린이집 설치 여건 실태 ●●● 33

〈표 Ⅲ-10〉 산업유형 및 주력업종별 어린이집 유무

(단위: 개소(%))

		어린이집 존재 여부		계
		있다	없다	
산업유형	국가산업단지	5(55.6)	4(44.4)	9(100.0)
	일반산업단지	13(17.8)	60(82.2)	73(100.0)
	농공단지	8(11.4)	62(88.6)	70(100.0)
	자유무역	0(0.0)	3(100.0)	3(100.0)
주력업종	중공업	12(15.4)	66(84.6)	78(100.0)
	경공업	6(13.6)	38(86.4)	44(100.0)
	전자산업	7(35.0)	13(65.0)	20(100.0)
	화학공업	1(9.1)	10(90.9)	11(100.0)
	비제조업	0(0.0)	2(100.0)	2(100.0)
계		26(16.8)	129(83.2)	155(100.0)

한편 산단내에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이 입주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볼 때, 입주해있는 산단에서 어린이집 설치율이 현저히 높아 42.9%를 기록했으며, 한편 중소기업으로만 이루어진 산업단지에서는 설치율이 9.2%에 불과했다. 임의사업장만 입주해있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단지가 절대 다수를 이루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더 강화되어야 할 수 있다.

〈표 Ⅲ-11〉 산단내 의무사업장 입주 여부별 어린이집 유무

(단위: 개소(%))

		어린이집 존재 여부		계
		있다	없다	
산단내 의무사업장 존재여부	없음	11(9.2)	109(90.8)	120(100.0)
	있음	15(42.9)	20(57.1)	35(100.0)
계		26(16.8)	129(83.2)	155(100.0)

나. 어린이집 설치 여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불리하거나 어린이집 설치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는 산업단지 환경 여건에 대한 진술들을 제시하고 매우그렇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의 척도상에 응답하게 한 결과, 환경의 위해성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으로 치우친 응답이 나온 반면(평균 3.47, 3.87), 보육수요 부족(2.63), 단지 외부에 대체 어린이집 충분(2.94),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하는 편이었다. 특히 산단내 설치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가장 긍정으로 치우친 응답이 나왔다(평균 2.45).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지가 위해 환경 및 위험요소에 노출돼 있다는 진술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한 업종은 경공업과 전자산업이었으며, 설치공간 부족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업종은 중공업과 화학공업이었다. 이들 두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산단은 환경적인 면에서 보다는 설치공간의 부족 면에서 어린이집 설립 여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표 Ⅲ-12〉 산단내 어린이집 설치 여건에 대한 인식

		N	평균
우리 산단에는 악취, 분진, 소음 등이 많이 발생한다	중공업	78	3.36
	경공업	44	3.61
	전자산업	20	3.85
	화학공업	11	3.00
	비제조업	2	3.50
	합계	155	3.47
우리 산단에는 유해물질 유출, 폭발, 화재 등 위험 요소가 있다	중공업	78	3.85
	경공업	44	4.09
	전자산업	20	3.80
	화학공업	11	3.27
	비제조업	2	4.00
	합계	155	3.87

Ⅲ. 산업단지의 현황 및 어린이집 설치 여건 실태 ●●● 35

		N	평균
우리 산업은 주거단지나 도심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	중공업	78	2.94
	경공업	44	3.00
	전자산업	20	3.25
	화학공업	11	3.00
	비제조업	2	3.00
	합계	155	3.00
우리 산업에는 30-40대 젊은 근로자의 비중이 낮아 미취학 자녀를 둔 근로자가 적다	중공업	78	2.58
	경공업	44	2.36
	전자산업	20	3.20
	화학공업	11	2.82
	비제조업	2	3.50
	합계	155	2.63
우리 산업에는 근처 배후지역에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많다	중공업	78	3.01
	경공업	44	2.93
	전자산업	20	2.70
	화학공업	11	2.91
	비제조업	2	3.00
	합계	155	2.94
우리 산업에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다	중공업	78	2.31
	경공업	44	2.70
	전자산업	20	2.50
	화학공업	11	2.36
	비제조업	2	2.50
	합계	155	2.45

매우그렇다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한편 현재 조사대상 산업단지 중 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9개소이며 이들 중 어린이집이 한 개소만 설치된 곳이 14개 산업단지로 53.8%, 2개소 설치된 곳이 6개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총 숫자는 4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Ⅲ-13〉 산단내 어린이집 숫자별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
1개소	14	53.8
2개소	6	23.1
3개소	4	15.4
4개소	2	7.7
계	26	100.0

이들 46개 산단내 어린이집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3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국공립어린이집이 34.8%, 민간어린이집(26.1%) 순이다. 직장어린이집 중에서는 단독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많고(11개소 23.9%), 산업단지형을 포함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7개소 15.2%에 달했다.

〈표 Ⅲ-14〉 기설치 어린이집 유형별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
단일 사업장이 설치, 운영하는 단독 직장어린이집	11	23.9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포함)	7	15.2
국공립어린이집	16	34.8
민간어린이집	12	26.1
계	46	100.0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는 장소별로 살펴보면, 지원시설구역과 입주 기업체 사옥에 설치된 경우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50%, 45.7%). 공공시설구역이나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각각 1개소씩에 불과했다.

Ⅲ. 산업단지의 현황 및 어린이집 설치 여건 실태 ●●● 37

〈표 Ⅲ-15〉 어린이집 설치 구역별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
공공시설 구역	1	2.2
지원시설 구역	23	50.0
공원(녹지)	1	2.2
입주기업체사옥	21	45.7
합계	46	100.0

지원시설구역에 설치된 23개 어린이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15개소(65.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지원시설구역에 많은 유형은 민간어린이집(5개소)과 (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3개소)이었다. 단독직장어린이집은 예외없이 입주기업체 사옥내에 설치되는 경향을 보였으며(11개소), (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은 공원을 제외하고 각 시설용지에 골고루 분포해있으나 지원시설구역과 입주기업체사옥에 설치된 경우가 각각 3개소로서 가장 비중이 크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시설구역에 설치된 경우가 1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 구역에도 유일하게 설치된 사례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직장어린이집도 공원에 설치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으나 아직까지 공원부지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어린이집은 주로 지원시설구역(5개소)과 입주기업체 사옥(7개소)에 설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입주기업체 중 공간에 여유가 있는 기업체가 임대 형식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신규 인센티브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Ⅲ-16〉 설치 구역별·유형별 어린이집 분포

(개소, %)

구분	단독 직장어린이집	(산단형)공동 직장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계
공공시설 구역	0(0.0)	1(100.0)	0(0.0)	0(0.0)	1(100.0)
지원시설 구역	0(0.0)	3(13.0)	15(65.2)	5(21.7)	23(100.0)
공원(녹지)	0(0.0)	0(0.0)	1(100.0)	0(0.0)	1(100.0)
입주기업체사옥	11(52.4)	3(14.3)	0(0.0)	7(33.3)	21(100.0)
합계	11(23.9)	7(15.2)	16(34.8)	12(26.1)	45(100.0)

한편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지자체나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건물 혹은 신축할 부지)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 산단 중에서 87곳(56.1%)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부지나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나머지 산업단지들 중에서 해당 공간이 산업단지내 어느 구역에 있는지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68개 산단에서 총 72개의 공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68개 산단 중 42.8%가 지원시설 구역에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빈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입주기업협의회나 산업단지(관리)공단 건물내에 해당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산단은 16.2%에 달했고, 공공시설 구역 내에 있다는 응답은 14.7%, 공원이나 녹지 내에 있다는 응답은 8.8%에 달했다. 이번에도 지식산업센터에 있다는 응답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분양이나 임대를 통한 어린이집 유치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자체나 산업단지공단 등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 곳임을 짐작케 한다.

Ⅲ. 산업단지의 현황 및 어린이집 설치 여건 실태 ●●● 39

〈표 Ⅲ-17〉 무상제공가능 부지(공간)의 위치별 분포: 복수응답

(단위: 개소, %)

구역	응답 산업단지 수	응답 %(무상제공가능 부지가 있는 68개 산단 대비)
입주기업협의회나 산업단지(관리)공단 건물 내	11	16.2%
입주기업체 사옥 내	2	2.9%
공공시설 구역 내	10	14.7%
지원시설 구역	29	42.6%
공원(녹지) 내	6	8.8%
잘모름	14	20.6%
합계	72	105.9%

다.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참여실태와 전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사업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두 개 산단만이 공모에 응해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153개 산단은 공모에 응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불참 산단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우리 산단에는 어린이집이 필요없거나 설치가 부적절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공모 불참 산단의 69.9%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그런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를 이유로 선택한 산단이 23.5%,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를 이유로 응답한 산단이 17.6%, “참여사업주 모집 실패”가 11.1%에 달했다. 또한 “설치공간(부지)이 부족해서”를 이유로 든 산단은 5.2%에 달했다.

따라서 컨소시엄 공모 사업 참여자를 늘리려면 가장 먼저는 환경이나 교통, 보육수요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해당 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것이 필요하거나 타당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각 산단 관리운영주체가 산단내 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사업자체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여야 하고, 셋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

너 비율 기준을 완화하거나 개원 시점 부타가 아니라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넷째, 참여사업주 모집에 필요한 컨설팅과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설치공간(부지)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Ⅲ-18〉 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에 응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단위: 개소, %)

구역	응답 산업단지 수	응답 %(공모에 응한적 없는 153개 산업단지 대비)
대표사업주(주관기관)를 선정하지 못해서	5	3.3%
참여사업주를 모집하지 못해서	17	11.1%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27	17.6%
컨소시엄 참여자들 간 약정을 체결하지 못해서	1	0.7%
그런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	36	23.5%
우리 산업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107	69.9%
설치공간(부지)이 부족해서	8	5.2%
기타	10	6.5%
계	211	137.9%

한편 공모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관리운영주체 유형별, 산업단지 유형별, 주력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산단내 어린이집 설치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해서 응모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국가산단(77.8%) 혹은 농공단지(78.3%), 그리고 중화학 공업이 주력업종인 산단(72.7%)에서 특별히 더 높았고, 그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다는 응답비중은 지자체가 관리운영주체인 산단(31.4%), 일반산단(27.8%), 경공업·화학공업·비제조업이 주력업종인 산단(27.9%, 45.5%, 50%)에서 특별히 높았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 미충족을 공모에 응하지

Ⅲ. 산업단지의 현황 및 어린이집 설치 여건 실태 ●●● 41

많은 이유로 든 산단의 비중은 입주기업협의체가 관리운영주체인 산단(35.9%), 농공단지(23.2%), 경공업이 주력업종인 산단(20.9%)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설치공간 부족을 이유로 든 비중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인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산단(18.8%), 일반산업단지(11.1%)에서 현저히 높았다. 이렇게 산업단지 유형별로 산단형 공동어린이집 공모사업 불참 이유가 다르므로, 사업확대를 위해서는 산단 유형별로 맞춤형 전략과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19〉 관리주체 유형별, 산단유형별, 주력업종별 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에 응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단위: 개소, %)

산업단지 구분	대표 사업주를 선정못함	참여 사업주를 모집못함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 요건미충족	그런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	산단내 설치불필요 혹은 부적절	설치공간 부족	기타
한국산업 단지공단	0.0%	11.1%	0.0%	0.0%	77.8%	0.0%	0.0%
산업단지 관리공단	12.5%	12.5%	12.5%	12.5%	75.0%	18.8%	0.0%
지자체	3.5%	12.8%	12.8%	31.4%	65.1%	2.3%	11.6%
입주기업 협의체(협회)	0.0%	7.7%	35.9%	12.8%	76.9%	7.7%	0.0%
국가산업단지	0.0%	11.1%	0.0%	0.0%	77.8%	0.0%	0.0%
일반산업단지	4.2%	12.5%	15.3%	27.8%	61.1%	11.1%	5.6%
농공단지	2.9%	10.1%	23.2%	20.3%	78.3%	0.0%	8.7%
자유무역	0.0%	0.0%	0.0%	66.7%	66.7%	0.0%	0.0%
중공업	2.6%	10.4%	19.5%	18.2%	72.7%	6.5%	7.8%
경공업	4.7%	11.6%	20.9%	27.9%	69.8%	4.7%	2.3%
전자산업	5.0%	15.0%	5.0%	20.0%	65.0%	5.0%	15.0%
화학공업	0.0%	0.0%	18.2%	45.5%	72.7%	0.0%	0.0%
비제조업	0.0%	50.0%	0.0%	50.0%	0.0%	0.0%	0.0%

마지막으로, 향후 산단형공동어린이집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53개 사업 미참여 산단 중 24개소(15.7%)만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지자체가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산단(25%, 17.4%), 일반산단(16.7%), 경공업·전자산업을 주력업종으로 하는 산단(18.6%, 20%)에서 향후 참여계획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더 높았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국가산단 중에는 향후 참여계획을 갖고 있는 산단이 하나도 없었다.

〈표 Ⅲ-20〉 관리주체 유형별, 산단유형별, 주력업종별 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
향후 참여 계획유무

(단위: 개소, %)

산업단지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름	계
한국산업단지공단	0.0%	77.8%	22.2%	100.0%
산업단지관리공단	25.0%	62.5%	12.5%	100.0%
지자체	17.4%	54.7%	27.9%	100.0%
입주기업 협의체(협회)	10.3%	61.5%	28.2%	100.0%
기타	33.3%	33.3%	33.3%	100.0%
국가산업단지	0.0%	77.8%	22.2%	100.0%
일반산업단지	16.7%	52.8%	30.6%	100.0%
농공단지	15.9%	62.3%	21.7%	100.0%
자유무역	33.3%	33.3%	33.3%	100.0%
중공업	13.0%	59.7%	27.3%	100.0%
경공업	18.6%	58.1%	23.3%	100.0%
전자산업	20.0%	55.0%	25.0%	100.0%
화학공업	9.1%	63.6%	27.3%	100.0%
비제조업	50.0%	0.0%	50.0%	100.0%
계	24(15.7%)	89(58.2%)	40(26.1%)	153(100.0%)

4. 심층면접 결과

가. 조사 개요

산업단지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질적 정보를 얻기 위해 산업단지 3곳의 관리운영주체,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의 대표사업주, 산단내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심층면접 대상 리스트이다.

〈표 Ⅲ-21〉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산단 종류	조사대상	면접대상	소재지	관리운영주체
일반산단	공동어린이집 컨소시엄 대표사업주	기업 담당자	충북 청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농공단지	관리운영주체	운영주체 소장	충남 천안	입주업체 협의회
농공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원장	충남 천안	-
농공단지	컨소시엄 참여사업주	기업 담당자	충남 천안	-
농공단지	컨소시엄 대표사업주	기업 담당자	강원 춘천	춘천시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일반현황.
2.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보육 수요 파악 방식
3.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채원 조달 방식
4.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건립 부지(공간) 마련 방식
5.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채원 조달 방식(정부 지원 이외 추가 운영비 조달 방식)
6. 대표사업주 선정 및 참여사업주 간 협약 체결 과정 및 애로 사항
7. (지자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우) 어린이집 설치시 지자체의 역할 및 향후 지자체에 바라는 점.

8. 향후 다른 산업단지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유념해야 할 점, 또는 체크리스트.

나. 주요 결과

먼저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로자의 보육 수요 파악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주기업체 운영협의회 회의를 통해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민간 위탁운영업체가 보육수요 파악을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위탁운영업체가 입주사업체 운영협의회 회의도 여러인지해주고, 회원사 의견 취합, 보육수요 파악 등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춘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은 대부분 정부 지원금(설치비의 경우 15억5천 내외)으로는 부족하여 부족분에 대해 각 산단 실정에 맞는 분담 방식을 정해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분담 방식이 대체로 대표사업주가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었다.

“많이 모자라죠.. 정부지원금의 10%를 자부담하게 돼있는데, 참여사업주에게 공동부담시킬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 전액을 저희 00(대표사업주)에서 다 부담했어요. 그 금액(정부 지원금)은 그야말로 최소 지원...그것만으로는 그야말로 기본만 갖춰놓은 것 밖에 안되더라구요.”(청주)

“설치비 지원금 15억 이외에 입주업체운영협의회(대표사업주 역할)에서 3억, 입주기업 중 의무사업장인 00사에서 3억을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충당했죠.. 그래서 저희는 설치비만 총 21억이 들어간 셈이에요. 시에서 부지는 무상 임대해줘서 토지비용은 전혀 안 들어갔는데도 그 정도였죠.”(천안)

“전액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분이 있으니까... 10%라도 부담스러워서 다들 대표사업주 역할을 꺼리셨어요... 10%자부담금 이외에도 대표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꽤 되더라구요. 1억5천이 아닌 2억, 3억이 될 상황이 생기더라구요.”(춘천)

이렇게 정부 지원금 이외에 추가 설치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면접대상자들은 주거지역 주변의 대체 어린이집보다 시설면에서 산단 어린이집이 월등히 좋아야만 원아 모집 및 유지, 그로 인한 근로자 유인 등이

Ⅲ. 산업단지의 현황 및 어린이집 설치 여건 실태 ●● 45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학부모들은 직장 가까운 곳 보다는 시설이 좋은 곳을 먼저 보내요...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이 중단되면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인력난이 시작된거죠. 그래서 인력난을 해소할 방안이 없겠느냐 고민하다가 과거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근로자 모집에 수월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어린이집을 열어서 아동에 대한 혜택만 주어진다면 사람들이 왔었거든요...정부 지원금과 자부담을 합한 16억5천 정도의 돈을 가지고 설치를 시작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되더라구요..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근저당 문제 등이 있고요.. 그리고 유구비품비 지원이 5천만원인데... 아이들에게 풍족하게 해주겠다 라고 생각하면 턱도 안되는 금액이더라구요..”(청주)

“...(산단 어린이집이) 일반어린이집과 같다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아이들을 맡기시진 않지요. 그래서 춘천에서 손꼽히는 어린이집을 짓겠다... 그래야만 근로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내지 않겠나...”(춘천)

어린이집 설치 부지(공간)는 주로 지자체의 무상 임대 혹은 대표사업주의 사옥 혹은 소유 토지 활용 등을 통해 조달되었다. 면접자 대부분은 부지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매입이나 임대 등의 방법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면 어린이집 설치 자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할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지자체나 기업체로부터의 무상 조달은 매우 우연적인 사건이므로 부지 조달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도 부지가 없었으면... 뭐 기약없었겠죠. 부지는 정말 운에 달린 것 같아요. 저희야 운 좋게 시에서 무상 임대를 해주는 바람에 엄두를 낼 수 있었던 거지요. 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천안)

“저희 대표이사께서 비록 의무사업장은 아니지만, 굳이 이 사업(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사업)이 아니라도 어린이집을 지으려는 생각이 평소에 많으셨어요...그래서 부지도 저희 회사 사옥내 토지를 선뜻 내놓으시고...”(춘천)

어린이집 운영비의 정부지원금 초과 부분에 대한 부담은 설치비 초과분에 대한 부담 방식과 마찬가지로 대표사업주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안 같은 경우 참여사업주 중에 의무사업장이 있고 입주기업협의체가 대표사업주 역할을 하는 경우에

는 의무사업장 측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협약이 돼있었다.

“힘들었어요... 제희가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돈이 들어가느냐 그걸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약정을 맺는데 운영상의 모든 책임은 저희 00사(대표사업주)가 진다는 내용을 넣었어요...최초 2년간은 정상운영이 어렵고 적자운영을 감수해야 할 것인데... 그 부분도 저희 00사(대표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나...대기업을 컨소시움에 참여시켜서 일정부분 운영비 부분만이라도 부담을 시키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고민 중이에요.”(청주)

“올해(2013년)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산단내 유일한 의무사업장)에서 70%(원아도 70% 공급 조건), 운영협의회에서 30%를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내년부터는 참여사업주가 1/n로 올해 운영협의회 부담분 30%를 공동부담하기로 했구요. 영세기업들이 많다보니까 1/n하기도 사업주들이 꺼리죠.”(천안)

대표사업주 선정 및 대표사업주와 참여사업주간 협약체결 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우선 어린이집 설치 운영 전 과정과 정부지원 사업 참여 과정에서 대표사업주가 져야 할 과도한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협약 체결 과정에서 참여사업주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연구개발 등 핵심인력이 주를 이루는 기업인지, 생산라인 위주의 인력을 주로 고용한 기업인지에 따라 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달라 이를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견해가 주목할 만 했다.

“대표사업주 역할은 진짜 CEO의 특별한 마인드가 없으면 어느 기업이든 자발적으로 떠맡지는 않을 거 같아요. 행정적인 절차부터 금전적인 것까지 대표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인센티브는 별로 없죠.”(춘천)

“생산공장이 입주해 있는 경우에는 왜 우리 핵심인력도 아닌데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생산직 근로자를 위해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어줘야 되냐.. 이런 마인드시구요.. 저희(대표사업주)처럼 정규직이나 연구개발직 같은 핵심 인력이 많은 입주기업은 어린이집 설치에 적극적이죠. 아무래도 서울에서 먼 이곳까지 근로자들을 유인하려면 자녀교육이나 이런 환경이 잘 돼 있으면 좋으니까요.”(춘천)

타 산단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대부분의 면

Ⅲ. 산업단지의 현황 및 어린이집 설치 여건 실태 ●●● 47

접자들이 사전에 꼼꼼한 계획 수립으로 예기치 못한 투자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전문 업체 혹은 기관에 의한 컨설팅이 건축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투자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대표사업주의 입장에서 부담하고 투자해야 할 금액에 대한 정확한 가늠이 필요해요. 시간을 가지고 초기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지 시간에 쫓겨 급박하게 하다보면... 처음엔 설치비 10%만 부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진행해가는 중에 인허가비, 철거비, 보증보험료 등등 계속계속 들어가야되는거예요. 적자를 보게될 초기 1,2년 동안 그 운영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등... 돈 들어가는 문제를 미리 잘 파악해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겁니다.”(청주)

“건축이나 인테리어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 컨설팅이 필요해요. 저희들도 예컨대 전등 같은 거 처음 완공했다가 어린이집 진단 나왔을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전등 갓을 다 교체했어요. 그게 다 추가비용이거든요. 사전에 이런 꼼꼼한 부분까지 컨설팅해주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천안)

“저희는 건축부터 위탁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인테리어 자재 이런 것들까지 다 세세하게 위탁업체에서 봐주셨어요. 어린이집은 일반 건물 짓는 것과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잘 짓는다고 지어도 하자보수 부분도 생기고... 조명 같은 것도 처음에 그냥 설치했다가 나중에 간접조명으로 바꾸고 그러면 그게 다 저희 부담으로 돌아오니깐...그래서 시공단계부터 전문 위탁업체에 맡겨서 자문을 받았죠.”(춘천)

IV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책제안

- | | |
|-----------------------|----|
| 1.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전제조건 | 51 |
| 2.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 활성화 방안 | 54 |
| 3.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함의 | 57 |

1.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전제조건

산업단지는 주력 업종, 관리운영주체, 입지 여건, 입주 기업 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등등 무수한 요인들의 영향 하에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조건에 처해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산업단지가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기에 적합한 산업단지란 과연 어떤 산업단지인지, 즉 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위해환경 검토

앞서의 분석에 따르면, 첫째 산업단지의 환경이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단지에 따라 입주 기업이 유해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을 유발하거나, 화재나 폭발 등과 같은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이나 위험요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평가할 산단 어린이집에 국한된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영유아 보육법에 관련 조항 신설 필요). 이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산업단지 관리운영주체들 중에서 자신이 관할하는 산단에 “악취, 분진, 소음 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18.1%(매우그렇다 5.2%, 그런 편이다 12.9%), “유해물질 유출, 폭발, 화재 등 위험 요소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9.7%(매우그렇다 2.6%, 그런 편이다 7.1%)였다. 두 문항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매우그렇다”나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산업단지는 21.3%에 달한다. 산업단지 관리운영주체가 응답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하는 산단의 위해성 정도에 대해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로 환경적으로 위해하여 어린이집 설치가 곤란한 산단의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나. 산업단지 노후화 정도 검토

두 번째로 따져보아야 할 조건은 노후화 정도이다. 노후산단의 경우, 앞서 살펴본 환경적 위해성 문제가 심화돼 이미 주변 주민들로부터 산단 이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변이 이미 도심화된 경우가 많아 도로 부족 등으로 교통량이 호폭주하고 단지내 주차문제가 산단 자체의 물류 및 유통기능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박영철, 2012; 최정석, 2011), 이 경우 어린이집 설치에 별도의 등하원 교통수단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자가운전 수요를 확대시켜 산단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어린이집 설치 예정이거나 기 설치 산단의 경우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영계획이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으며, 어린이집 이용자는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천안). 그러므로 교통혼잡과 주차문제는 노후산단을 어린이집 설치 적합 산단 후보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된다. 게다가 노후산단은 향후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이 되어 대규모 공장 이전과 재구조화 과정을 겪게 될 경우,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할 여건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 현재 노후산단의 비중은 전체 산단의 25%에 육박하고, 입주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하면 80%를 넘어선다(장철순, 2013: 7).

다. 설치공간 확보

세 번째 조건은 설치 부지(공간) 확보이다.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간 마련 방식은 지자체나 산단공 등에서 자체 보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 공동직장어린이집 대표(참여) 사업주 중에서 자사 사옥내 부지나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산단내 분양 중인 부지나 공간을 직접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등으로 대별된다. 세 번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 모두 드러난 사실인 바, 우선은 지자체나 산단공 등으로부터 부지나 공간을 제공받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 효과적인 부지 확보 방식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산단의 56.1%가 그렇게 제공받을 수 있는 부지나 공간이 전혀 없다고 응답

IV.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책제안 ••• 53

했다. 또한 “우리 산단에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진술에 대해 65.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매우 그렇다 15.5%, 그런 편이다 49.7%).

라. 보육수요 확보

마지막으로 확인할 조건은 보육수요이다. 심층면접 결과 대체로 보육정원 60명을 채우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초기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이 규모의 보육아동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심층면접 조사 대상인 한 업체에서는 “아동 확보가 제일 문제예요. 처음에는 60명을 다 채울 수 없으니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요건에 안맞는 아동도 받죠. 그러면 또 지원금이 깎여요. 그러면 아동을 또 더 모아야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청주). 그러나 아동확보는 좋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어린이집을 일단 성공적으로 개원하여 운영하면 개원 후 길어도 3년 정도 이후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은 전망하고 있었다. 사실 수요조사 당시에 당장 산단내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아이를 보내겠다는 응답 비율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산단내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부모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확인되면 부모들의 수요는 지역의 대체 어린이집들에서 산단내 어린이집으로 언제든 이동할 수 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산단내 입주 근로자들의 연령대가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 40대를 넘겨 잠재수요마저 부족한 경우이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우리 산단에는 30-40대 근로자들의 비중이 낮아 미취학 아동을 둔 근로자가 적다”에 대해 51%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매우 그렇다 11%, 그런 편이다 40%). 그러나 이는 산단 관리운영주체의 짐작에 입각한 응답일 뿐으로, 보다 더 정밀한 기업단위 혹은 근로자 단위의 조사를 통해 근로자 연령대를 파악하면 잠재수요가 부족해서 어린이집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산단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⁵⁾

마.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체크리스트

그러므로 어린이집을 설치해도 안전할 만큼 환경적으로 위해하지 않은 산단(별도 안전 기준, 설치 기준 마련 필요), 노후산단이 아닌 산단, 지자체나 산단공, 입주 기업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나 공간 확보가 가능한 산단, 미취학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3-40대 근로자(남녀불문)의 비중이 높은 산단이 단기적 시간 지평에서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네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가장 적합한 산단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더 대표성 높은 조사를 통해 이들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산단의 비중이 얼마나 되고 관리운영주체나 업종이나 산단유형별 분포는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단내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체크리스트로 확정하여 보급해야 한다. 환경이나 교통, 보육수요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특정 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것이 필요하거나 타당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각 산단 관리운영주체가 산단내 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 활성화 방안

산업단지에 어떤 유형의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인가에 따라 지원방식이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에 특정 산단에 대해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설치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놓고 해당 산단 별로 자율적으로 가장

-
- 5) 일부 수요조사에서는 (가임기)여성 근로자의 수를 조사하는 것으로써 수요를 가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어린이집 수요를 과소 추정할 우려가 있다. 이제 자녀 양육은 부모 모두의 의무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개원한 한 산단 어린이집 원장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남성 근로자가 아동을 데리고 출근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보고했다(천안).

IV.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책제안 ●●● 55

적합하고 효과적인 정책 믹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설계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앞서 산단에 설치될 어린이집 유형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누어 기존 지원 정책들을 리뷰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세 유형의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향후 개선해야 할 지원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직장어린이집

첫째, 산업단지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제안한다. 우선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 기준을 완화하거나 개원 시점 부서가 아니라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제59조, 혹은 근로복지공단 “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 개정 필요 : 제22조, 38조),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의 경우 참여사업주 모집에 필요한 컨설팅과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비 지원에 대해 사업주 자부담 비율(현행 10%)을 중소기업에 한해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개정 필요 : 별표 1), 설치 사업주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는 대표사업주에게만 제공되므로 이를 참여 사업주에게까지 확대하고, 동시에 여러 부담을 떠안게 되는 대표사업주에 대해서는 좀 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상기 근로복지공단 예규 개정 필요 : 제25조, 제40조 3항).

나. 국공립어린이집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제안한다.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그리고 지자체의 보육계획에 산단에 설치할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계획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산집법에 따르면 산단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되어있으므로(법 제33조 5항), 관리기관으

로 하여금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 근로자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법적 근거가 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중앙 및 지자체 보육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계획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1조). 따라서 시도 보육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 산업단지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여건을 따져 계획에 설치 물량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산단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과 시도 보육계획에 따른 해당 산단 소재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공급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산단 관리기관과 지자체 보육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과 협업이 요구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설치를 명시한 것처럼(법 제12조), 산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우선 설치 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한다(법 제12조 재정 필요).

다. 민간어린이집

셋째, 민간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기존 사업 리뷰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양가 하향조정 및 지식산업센터내 어린이집 유치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산단내 입주를 유도하고 있지만, 타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이 임대 건물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앞서 살펴본 산업법 상의 분양가 인하 조치에 덧붙여 어린이집 용지에 대한 임대료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 현재는 산집법상 공급 분양가에다 시중은행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임대료를 규정하고 있으나(령 제 41.42조) 어린이집 용도의 경우 임대료 인하 특례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 다른 근로자 복지시설(학교, 직업훈련기관, 의료시설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공통 지원 방안

마지막으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어린이집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산단 환경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산단은 업종별, 입지여건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전국 산단 전반에 걸쳐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환경기준을 충족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설치기준 확립이 필요하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 추가 필요 : 법 제15조, 령 별표). 또한 현재 산업단지 단위로 재생사업이나 구조고도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바, 시행주체가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어린이집 공간을 확보할 시 용적률 상향조정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단내 어린이집 유치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어린이집 등 산업단지내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 역시 구조고도화사업의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산집법상에도 구조고도화사업에서 정비 확충해야할 공공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충분히 갖춘 지원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법 제 2조 11호, 시행령 제 4조 5호).

3.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합의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어린이집 형태 중 하나이다(보육실태조사, 2012).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은 근로자 충성도, 이직률, 등등을 고려할 때 비용대비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원종욱, 2013). 그러므로 직장보육 활성화는 노동시장 수요측면에서나 공급측면에서 보육 정책의 고용 친화성을 강화시켜줄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보육의 활성화는 수요 측면에서 여성의 여성인력 혹은 가임기 청년 인력의 채용을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자녀 양육기 여성들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공간(부지) 확충

이 연구를 통해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직장보육 활성화 라는 더 넓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로 이 연구는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항 중 하나가 장소 확보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 장소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및 일정 조건을 갖춘 산업단지 조성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영유아기 근로자를 위한 보육수요영향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단지 용지 구획 확정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제시한 환경기준 및 체크리스트 상의 요건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⁶⁾ 또한 기업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자사 사옥의 공간을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 파격적인 면감세 혜택이 필요하다.

나.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제도 개선

둘째, 이 연구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보육서비스 수요가 반드시 기업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업종 특성상 어린이집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입지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설치해 해당 기업의 업종 특성, 입지 환경, 근속 근로자의 실보육수

6)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상 설치 기준을 직장어린이집(혹은 산업단지내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나(보육실을 1층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요건 완화 등), 영유아의 안전 및 필수 환경 요건과 관련한 설치 기준은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이여진, 2013).

IV.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책제안 ●●● 59

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입지 환경이 적합하고 부지확보가 용이하면서 자력으로나 공동으로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곤란한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한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동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2조 개정 필요).

다. 직장어린이집 특화 보육프로그램 개발

셋째, 직장어린이집 특화 보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아동 보육에 대해 제기되는 가장 유력한 비판 중 하나는 영유아들을 부모들의 근로시간 주기에 맞추어 장시간 보육하는 것이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내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등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 뿐만 아니라, 일반 보육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장시간 보육에 걸맞은 직장어린이집 특화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현재는 범용 프로그램인 표준보육프로그램과 누리과정의 실시되고 있고,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직장어린이집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보육환경에 걸맞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체계적인 개발 과정을 거쳐 직장어린이집 특화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강화

넷째,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요구가 가장 큰 중소기업은 예산이나 재원의 부족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부족에도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이 개별 혹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할 때, 담당인력의 부족 혹은 경험의 부족 등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방법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컨설팅 및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 현재 이 기능을 담당하는 직장보육지원센터는 전국에 2개소만

운영되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컨설팅을 적절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현재 직장보육지원센터 인력 증원 및 중부권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보육정보센터는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등 여타 기능들을 강화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정보제공과 컨설팅 기능까지를 함께 부여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 직장보육지원센터의 확충과 인력 및 예산 보강을 보다 더 큰 폭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 향후 정책추진 방향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직장보육 관련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직장어린이집 관련 정책은 전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는 넓히는 대신, 사업주의 재정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초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 부담이 주요 선진국들 중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김지현, 2005). 노동권을 제한받지 않으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이지, 특정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부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관련 정책의 장기적 방향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설치시 패널티 강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당장에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될 여건이 안된다면(그래서 단기적으로나마 선별적 지원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면), 가장 취약한 집단에 우선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력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직장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중소 영세업체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직장보육 영역에서도 단계적으로 “보육의 공공화”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현, 2005: 8).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13),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보도 자료
- 도남희, 이정원, 김문정(2012),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육아정책연구원
- 백선정·백현식(2012), 「경기도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재단
- 보건복지부(2011),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대폭 늘어난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 김미정·고주희(2012), 「경기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재단
- 김재열, 이규하, 백성준(201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서의 공원·녹지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77권
- 김지현(2005), “직장보육 관련법의 변화과정 및 직장보육서비스의 개선방안”, 「한국생활과학회지」 14권, 2호.
- 대한상의(2010), “산업단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건의”
- 박영철(2012), “산업단지 관리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한 소고”,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권 2호.
- 박태현·최정호(2011),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과정의 시계열 분류 및 특성 연구”, 「국토연구」 68권, pp99-119.
- 서연미(2011), “산업단지의 복합화 동향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제330호
- 이여진(2013), “보육실 1층외 설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713호, 국회입법조사처
- 장철순(2013), “산업단지 1천개 시대와 산업입지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제420호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최정석(2011),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도시행정학보」 24집 3호.
- 한국산업단지공단(2012),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부 록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여건 파악을 위한
조사 설문지

65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여건 파악을 위한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택면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미취학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밀집 지역인 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뒷받침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여건, 어린이집 설치 시 충족돼야 할 제반 요건 등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향후 산업단지 입주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개인 혹은 기업 정보는 통계법(제1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9

■ 주관 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책임연구자 : 이택면 연구원

■ 조사 기관 : (주) 피플리서치

150-8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 백상빌딩 1006-1호

담당자 : 도영옥 부장 (Tel : 02-6335-4212 Fax : 0505-720-226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응답자 정보

소속 기관명			
응답자 성함		연 락 처	
소 속 부 서		직 위	

66 ●●●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과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귀하가 소속된 기관(혹은 단체)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한국산업단지공단
- ② 산업단지관리공단
- ③ 지자체 경제진흥과 등 산업단지 담당 부서
- ④ 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주 협의체(협회)
- ⑤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 다음은 귀 기관(혹은 단체)이 관리·운영하는 산업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 기관(혹은 단체)이 관리·운영하는 산업단지가 2곳 이상일 경우,
그 중 **고용규모가 가장 큰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2. 귀 산업단지는 다음 중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 ① 국가산업단지 ② 일반산업단지 ③ 농공단지
- ④ 도시첨단 ⑤ 외국인투자지역 ⑥ 자유무역

3. 다음은 귀 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에서 (6)까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산단에는 악취, 분진, 소음 등이 많이 발생한다					
(2) 우리 산단에는 유해물질 유출, 폭발, 화재 등 위험 요소가 있다.					
(3) 우리 산단은 주거단지나 도심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					
(4) 우리 산단에는 30-40대 젊은 근로자의 비중이 낮아 미취학 자녀를 둔 근로자가 적다					
(5) 우리 산단에는 근처 배후지역에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많다.					
(6) 우리 산단에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다.					

4. 귀 산업단지의 **주력 업종(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무엇입니까?

5. 귀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 종사자수 5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_____개 사

6. 귀 산업단지에는 배후지역이 아닌 단지 내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모두 몇 개입니까? _____개 ➡ 문 6-1, 6-2에 응답 후, 문 7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7로 가세요

6-1. 위에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됩니까?
 어린이집이 여러 개일 경우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어린이집이 3개일 경우, 어린이집 1,2,3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집1	어린이집2	어린이집3	어린이집4
① 단일 사업장이 설치·운영하는 단독 직장 어린이집				
②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한 공동직장 어린이집(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포함)				
③ 국공립어린이집				
④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⑤ 민간어린이집				
⑨ 잘모름				

6-2. 위에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다음 중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여러 개일 경우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아래의 표에 응답해 주세요.
 (※ 어린이집이 3개일 경우, 어린이집 1,2,3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집1	어린이집2	어린이집3	어린이집4
①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내				
② 공공시설 구역				
③ 지원시설 구역				
④ 녹지(공원)				
⑤ 입주 사업체 사옥 내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⑨ 잘모름				

7. 귀 산업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지자체나 산업단지공단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건물 혹은 신축할 부지)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구역에 있는지 모두 체크해 주세요.

- | | |
|---------------|----------------------------|
| ①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 | ② 입주기업협의회나 산업단지(관리)공단 건물 내 |
| ③ 입주 사업체 사옥 내 | ④ 공공시설 구역 내 |
| ⑤ 지원시설 구역 내 | ⑥ 녹지(공원) 내 |
| ⑦ 기타 구역 _____ | ⑧ 한군데도 없다 |
| ⑨ 잘모름 | |

8.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 협의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 할 경우 설치비를 최대 22억원까지 지원하는(융자 포함) 이른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 산업단지는 2012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에 응모해본 적이 있습니까?

- | | |
|--------------------------|------------------------|
| 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 ➡ 문 8-1, 8-2를 응답해 주세요. |
| ② 공모에 응한 적이 있으나 선정되지 않았다 | ➡ 문 8-1, 8-2를 응답해 주세요. |
| ③ 공모에 응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 문 8-1, 8-2를 응답해 주세요. |
| ④ 공모에 응한 적이 없다 | ➡ 문 8-3, 8-4를 응답해 주세요. |

- 8-1. 공모에 참여할 당시, 다음 중 어디에서 대표 사업주(주관기관) 역할을 맡았습니까?

- | | |
|---------------------|------------|
| ① 산업단지공단 | ② 산업단지관리공단 |
| ③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협회) | ④ 지자체 |
| ⑤ 입주기업 | ⑥ 기타 _____ |

- 8-2. 공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어려움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_____), (_____)

- | |
|-------------------------------------|
| ① 대표 사업주(주관기관) 선정 |
| ② 참여 사업주 모집 |
| ③ 보육수요 조사 및 확인 |
| ④ 컨소시엄 참여자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약정 체결 |
| ⑤ 구비 서류 복잡 등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
| ⑥ 기타 (적어주세요.)_____ |

8-3. 공모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① 대표사업주(주관기관)를 선정하지 못해서
- ② 참여사업주를 모집하지 못해서
-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 ④ 컨소시엄 참여자들 간 약정을 체결하지 못해서
- ⑤ 그런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
- ⑥ 우리 산업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_

8-4. 향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Building More Daycare Centers in Industrial Complexes and Facilitating Corporate Childcare Services : Policy Agendas and Recommendations

Tack-Meon Yi
Hee-Jung Yoo
Hee-Young Moon
Mee-Jung Kim

The study aims to review current policy programs geared to facilitate daycare center services within the precinct of an industrial complex and to offer policy proposals in order to build more and better daycare centers within the complex, thereby promoting work-life balance among workers at resident companies. With this purpose in view, the study first examines a wide array of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s of corporate childcare and industrial complex restructuring. Then it scrutinizes existing policies aiming to promote childcare services in industrial complexes, finding pitfalls and weaknesses which shall be redressed by policy redesign. It is noted that not all complexes being suitable for daycare

center services, a criterion by which a complex can judge whether or not it is fit for hosting a daycare center within its precinct should be established. Such a criterion should involve a set of measures which can show whether or not the complex is dangerous, degenerating, securing suitable spaces earmarked for a childcare center, and commanding a high level of demand for an onsite childcare service among its workers. Based on a survey, the study also analyses conditions both amenable and detrimental to providing onsite daycare services within those 155 industrial complexes which are selected randomly from the 300-about industrial complexes whose list has been compiled by the Center for Facilitating Corporate Childcare Services. The study also collects qualitative information about difficulties facing a group of firms which have been endeavoring to build their own daycare centers within their industrial complexes. Finally the study suggests a series of policy recommendations and illuminates further implications for providing both men and women workers with a quality childcare support service.

2013 연구보고서(수시과제)-16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과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013년 9월 28일 인쇄

2013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618-0 93330

<정가 13,000 원>